

다산포럼



김재민 철학자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한국에서 인문학, 사회과학, 예체능, 융복합 등 이른바 '인문사회' 연구 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이들 사업은 개인 연구와 집단 연구, 기반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유형과 다양한 세분 영역으로 나뉜다. 개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함한다. 석사학위를 받은 초보 연구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문 후속 세대, 막 교수에 임용된 신진 연구자, 일정 기간 교수직을 이어온 중견 연구자, 그리고 원로급 우수 학자, 저술 및 번역 출판, 한국 고전 번역 연구자 및 명인이자, 팀을 이루어 수행하는 공동 연구 등이다. 집단 연구는 대학 '연구소'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를 포괄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경제·경영' 분야 대학 연구소도 포함된다. 기반 구축에는 인문학 대중화, (학술단체 지원, 우수 학술도서 지원, 학술자원 공동 관리, 연구 윤리 교육)

대한민국은 기형적 선진국이다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괄호로 묶은 부문은 이공계 포함 '모든' 지원 사업 공통이다. 참고로, 세금으로 지원되는 인문사회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하고, 집행하는 기관은 교육부 유관 기관 '한국연구재단(NRF)' 하나뿐이다. 자, 그러면 '인문사회' 연구 지원 사업의 총예산이 얼마나 될까? 1조 원? 5000억 원? 아니다. 무려 2400억 원이나 된다. 앞서 열거한 '모든' 사업 지원 총예산이 2400억 원이다. 2022년 한국 정부의 예산 총액은 607조 원 가량이 다. 2022년 기준 연구개발비(R&D) 총액은 29조 8000억 원, 인문사회 예산 총액은 3030억 원(앞의 연구개발 외에 지출되는 영역인 글로벌연구네트워크, 한국학중앙연구소 등까지 포함)이며,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1.0%, 총예산 대비 0.5% 미만에 불과하다. 비교하자면, 그토록 지원 규모가 열악하다고 얘기되는 교육부의 이공계 예산, 즉 순수과학 학술 지원 예산은 2022년 기준 5474억 원으로, 인문사회 예산의 1.8배 다.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겠지만, 인문사회과학(가장 넓은 의미의)과 유사한 활동이라 일컬어지는 '종교' 지원 규모는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의 '종교문화 활동 및 보존 지원' 사업 예산은 2022년 기준 607억

원이다. 인문사회 연구개발의 4분의 1 규모다. 심지어 이견 그냥 주는 돈에 가깝다.('종교학'도 인문사회 영역에 포함되지만 종교학은 종교가 아니다. 연구 활동을 해야만 한다.) 나는 이 수치가 대한민국의 현재를 잘 말해 주고 있다고 본다. 나는 대한민국 시민의 무관심이 이런 현상을 초래했다고 본다. 먹고사는 문제에만 골몰하느라 시민이 관심을 두지 않을진대, 어떻게 상황이 좋아질 수 있겠나? 비유컨대, 대한민국은 99%의 돈과 1%의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인문사회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딱 그러하다. 나는 이 비율이 적어도 95대 5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많은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의 공통된 바람이기도 하다) 적어도 자기 정부에서는 97대 3 비율은 달성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생명의료 분야에서 5% 정도를 '환경·교통·개인정보 등 영향 평가'나 '윤리위원회(IRB)' 등에 의무 지원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선진국은 돈과 기술, 군사력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선진국은 가치와 사상을 선도해야 하며, 문화와 매력을 통해 자발적으로 설득하는 역량도 갖추어야 한다. 부디 우리 모두가 돈이 충분할 때 어떻게 사는 게 잘사는 삶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청춘 특특

나비의 작은 날갯짓을 꿈꾸며



박영진 조세대 자유전공학부 1학년

한 사람의 1분은 전 세계 구성원의 작은 날갯짓 하나하나가 모여 형성되며, 현재의 나는 그 인과관계를 통해 만들어졌다. 크고 작은 개인의 행동들이 백 개가 되고 수십억 개가 되어 세계의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라고 치부되는 국적과 인종, 부의 격차, 섹슈얼리티와 같은 사회적 문제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인 동시에 '나'의 문제다.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과 연관된 수많은 개개인의 날갯짓이 돌고 돌아 나에게로 닿기 때문이다. 그 최초의 날갯짓이 되는 것이 나의 작은 꿈이다. 물론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날갯짓을 할지 예측할 수 없다. 내 크고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와 세상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공

부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 때문에 날이 갈수록 내가 쓰고 있는 '글'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커진다. 혹여나 내 작은 날갯짓이 누군가에게 같이 되진 않을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우려에서 나오는 것이다. 요즘 글을 쓰며 느끼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쓰거나, 명확하게 시비를 따질 수 있는 식상한 '당연한 이야기'를 잘 포장해 쓰고 있는 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서 바라보는 평범한 일상들, 그 속에서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실에 의의를 제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졌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학업을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 청년제도 등 내가 바라보는 것을 모두가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문득 누군가에게 내 당연한 이야기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의 사회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이자 수습 기자, 20대 청년인 나의 신분과 위

치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학업 생활의 어려움, 대학생이 바라보는 사회, 대학생만이 알 수 있는 청년 제도의 문제점.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나이, 이 시절에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그 '당연한 이야기'들을 계속 써 내려가기로 했다. 지금의 기록들이 미래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부끄러움투성이일지 모르지만 내가 당연하다 여겨온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며 물음표를 던져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 당연한 이야기는 더 이상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 '다양한 이야기 중 하나'가 됐다. 내 글을 본 누군가가 그 글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내 세계를 엿보고 이를 통해 영감을 얻는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그저 나의 작은 날갯짓이 상대가 만드는 작은 날갯짓에 도움을 주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작은 날갯짓은 처음부터 태풍을 몰고 오진 않는다. 그것들이 모였을 때 큰 바람을 몰고 온다. 내 작은 날갯짓이 선한 영향력의 태풍을 몰고 오기를, 국적·인종·부의 격차·섹슈얼리티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연대하여 옳은 방향을 향해 날갯짓하는 세계를 눈으로 보는 날이 오기를 꿈꾼다.

社說

민주당 뼈를 깎는 쇠신 없이는 미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촛불 민심의 압도적인 지지로 집권한 지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는데도 치열한 성찰이나 혁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어제부터 윤호중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대대적인 물갈이보다 당내 분란을 최소화한다는 명분 아래 '질서 있는 전열 정비'를 택한 것이다. 여기에는 대선에서 비록 졌지만 그래도 잘 싸웠다는 내부 평가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는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고, 역대 최소 표차로 패배한 점 등이 그 근거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이러한 수습책이 대선 패배 책임론을 비껴가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던 반면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과 존재감은 미미했던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반성이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대선에 기여한 특별 공로 자들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이처럼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172석의 거대 정당이라는 오만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불과 두 달여 뒤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변화와 혁신이 실종된 민주당은 또다시 패배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난 5년간의 과오와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과감한 정치 개혁과 근본적인 쇠신에 나서야 한다. 기록된 해체 수준의 정치 교체와 혁신 공천으로 탈라진 모습을 보여야 다시 민심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버스 기사 산재 인정 '직장 갑질' 근절 계기로

교통사고 처리 비용 전가 등 버스회사 '갑질'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내버스 기사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최근 시내버스 기사 A씨의 유족이 버스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유족 급여 청구에 대해 "A씨의 사망을 산업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판정위원회는 "A씨가 정규직 전환 후 11일 만인 지난해 6월 발생한 네 차례 사고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사고 처리(보험)하지 말고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아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살피면서 버스업계의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해 발생한 질병과의 상관관계까지 두루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판정위원회가 "개인적으로 처

리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는 회사 측 주장에 배척하고, 회사 담당자와 A씨의 통화 녹취록, 휴대전화 문자 내용 등을 적극 해석하고 내린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무엇보다 버스업계에 만연한 '직장 갑질'에 경종을 울린 점도 긍정적이다. 그동안 버스 업계에서는 운행 중 사고 책임을 모두 버스 기사에게 전가하는 '사고 처리 자부담' 관행이 공공연하게 이어져 왔다. 이번 업무상 재해 인정을 계기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태는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정부와 노동당국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 중임에도 고질적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갑질 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대처는 물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3주째 지속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세계 2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침공 2-3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고 친러 정권을 세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과 시민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정점으로 강하게 저항하면서 러시아가 굳은 수도 키이우를 물론 다른 주요 도시를 장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년 넘게 장기 집권하며 구 소련의 재현을 꿈꾸는 러시아의 '차르'(황제) 푸틴 대통령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여기에 명분 없는 전쟁 여파로 세계적 반발은 불러 러시아를 국제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다. 서방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로 민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은 물론 자국 내 반전 시위도 확산하고 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핵 카드마져 언급하자 일각에서는 그가 '오만 중후군'(hubris syndrome)에 빠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장기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아도취나 과대망상 등에 빠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 차르의 모습은 중국의

'시황제'로 평가되는 시진핑 주석과도 겹친다. 세계적 스트롱맨(권위주의적 지도자)인 시 주석이 집권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 간다. 올해 세 번째 주석 연임은 물론 종신 집권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길은 그리 밝지 않다. 과거 중국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중국몽'(中國夢)에 사로잡혀 패권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요구를 힘으로 관철하려는 '전량(戰狼·늑대전사) 외교',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역사 왜곡의 동북공정(東北工程)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러시아를 두둔하는 중국의 모습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불안을 높이고 있다. 패권주의에 기반한 오만과 고립은 결국 그 체제의 붕괴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 왔다. 대국은 결코 힘이 아닌, 공존의 평화를 이끄는 역할로 평가받는다라는 점을 푸틴과 시진핑이 되새기기를 바란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기 고

정의로운 광주를 위한 공정한 성과 평가



김영근 광주시 평가담당관

과거로부터 조직의 관리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업무 실적과 수행 능력,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이나 그러한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전좌(殿最) 또는 '포평'(褒評)이라고 해서, 관리의 평상 시 근무 상태를 조사해 맨 아래 등급과 맨 위 등급으로 구분하고 성적을 매기는 일종의 근무 성적 평정이 성종(成宗) 대에 처음 실시됐다고 한다. 이 제도는 6품 이하 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용됐다. 그중에서도 지방관에 대한 평정 관리 강화 목적으로 실시한 고려시대 고과법(考課法)을 조선시대에 승계한 것으로, 관리들의 근무 태도와 능력을 평가하는 고과법과 직속 상관에 의한 상벌 목적 위주의 근무 성적 평정 제도인 포평법(褒評法)으로 세분화됐다. 오늘날 성과 평가는 조직 내 개인 성과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형식을 가진 관리 시스템으로,

평가 자체를 위한 평가가 아닌 전체 조직 시스템속의 연속성 있는 조직의 운영 도구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성과 평가 항목은 구성원들에게 기대하는 구체적인 역량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역량은 행동, 기술, 특질, 기술적 전문성, 숙련, 속성 그리고 능력을 포함하는 탁월한 직무 기대와 상관 관계 등 모든 요소에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조직에서 성과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피드백의 제공일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업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계획 대비 달성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이용해 조직 전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성과 중심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2019년 '평가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조직 내외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사업 우선순위에 결정과 평가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었다. 사업의 기획부터 과정, 결과 모두에 초점을 맞춰 평가 로드맵을 수립함과 동시에 시 본청은 물론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까지 기관별 실정에 맞는 성과 창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결과의 충실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핵심이다. 특히 단순히 목표 달성만을 위해 간과할 수 있는 과정상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사업의 결과만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이 발전

적인 방향으로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목표와 성과를 균형 있게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과정 등을 거친다. 그동안 평가담당관실은 주요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보완해 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시정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발 빠른 현장 점검을 실시해 담당 부서와 함께 대책을 모색하고 민선 7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이라는 시정 목표 달성에도 힘을 보태왔다. 또한 주요 사업과 현안 사항 점검을 통해 당초 계획된 사업의 적기 마무리를 독려하고, 균형 성과 평가(BSC)와 성과 창출 계획 평가로 일과 성과, 보상 체계의 일치와 조직력을 극대화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의 시작을 견인하고 있다.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에는 공직자가 의욕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정과 성과가 균형을 이루는 공정한 평가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평가 시스템과 조직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평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측정의 과학이다. 공정한 성과 평가와 성과 창출 시스템이 활발하게 돌아갈 때, 우리 광주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기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